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

2013. 3. 28

교 육 부

차례

I. 교육 현실과 여건 진단	1
II. 국정비전과 교육	3
III. 국정과제 실천계획	4
IV. 부처 협업과제 및 현안사항	36
V. 달라지는 교육의 모습	45

〈붙임〉

1. 국정과제 100일 추진 일정	47
2. 입법 추진계획	54
3. 교육분야 국정과제 현황	55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바랍니다.>>

많은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대학입시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는데, 입시만을 위한 과목은 빼고 정작 필요한 인성 내지 감성과 창의력을 돌아 주는 교육과 함께 전공과목에 대하여 심화 교육을 한다면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나무 복주머니 제안)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꿈을 바르게 내다 볼 수 있도록 적성과 잠재능력의 발굴로부터 그것이 어떠한 직업에 이를 수 있는지 직업의 세계를 알려주고, 어떤 공부를 어느 과정까지 공부해야 하며 무엇을 잘 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희망나무 복주머니 제안)

<<교원의 근심, 걱정 없이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사란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찌면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꺼란 두려움이 생깁니다. (희망나무 복주머니 제안)

<<학비 부담을 덜어 주세요>>

기초생활조차 못하면서 구원의 손길도 못 받고 높은 등록금과 이자로 고통받는 우리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희망나무 복주머니 제안)

<<지방대를 지원해 주세요>>

수준 높은 대학교수나 강사가 지역전체를 돌며 강의하고, 시설수준도 전 대학 골고루 시설을 보완하면 굳이 지방학생들은 수도권 학교로 상경해서 살 필요도 없고 비용도 줄어 듭니다. (인수위 국민행복제안)

<<인생 후반기를 위한 교육>>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사회적 희망의 차원에서 다양한 학과 신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나무 복주머니 제안)

I. 교육 현실과 여건 진단

1 우리 교육의 현실

- **(성과)**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
 - **PISA 성적*** 등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높은 교육열로 국민들의 전체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
 - * PISA 2009 한국 순위 :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지속적인 교원 확충과 함께 연구년제·수석교사제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노력으로 교원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
 -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석·박사 과정 증가 등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평생교육원 확충 등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 * 평생교육 참여자 수 : ('08) 11.4백만 명 → ('12) 17.6백만 명
- **(한계)** 학생·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 질에 대한 불만 지속
 - **(학생)** 과중한 공부부담과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의 행복감*은 낮은 상황
 - * 낮은 학업 흥미도 (TIMSS '11, 수학) : (초4) 23%, (중2) 8%
 -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69.29점)
 - **(학부모)** 복잡한 입시전형, 과도한 사교육비, 높은 대학등록금 등은 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 대학등록금 : 국·공립 411만원, 사립 738만원, ** 총 사교육비('12) : 연간 19조원
 - **(교원)** 교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 업무, 교권 침해 증가 등으로 교원의 사기와 만족도는 크게 저하
 - * 교권 침해 사례 증가 : ('09) 1,570건 → ('12. 1학기) 4,477건
 - **(청년)** 취업여건 악화로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청년들은 학벌과 스펙 쌓기에 열중 * 낮은 대졸 취업률('12) : 59.5%
 - **(성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전직·조기퇴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분야 지원과 인프라는 아직까지 취약
 - * 평생교육 참여율('12년) : 35.6% (OECD 평균은 40.4%, 19위 수준)

2 교육 여건 진단

- 획일적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계발을 지원하여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
-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진단을 바탕으로 '병든 잎보다 뿌리를 살려 나가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최근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교육의 본질 회복 필요

- 성적보다 참되고 바른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의 필요성 증대**
- 학벌스펙보다는 **창의성인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

→

- **인성교육 강화**
- **학교 수업과 생활 지도 역할 강화**
- **공교육 정상화**

학령 인구 감소

- 모든 국민 각자의 잠재력 계발이 더욱 중요
* 학령인구(만 6~21세) 전망(만명) : ('10)1,001 → ('20)776
- 개개인의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

- **진로설계 지원**
- **시험부담 축소**

교육에 대한 요구 다양화

- 유아교육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다양한 요구 증대
- 학교의 돌봄 기능과 **장애·다문화학생** 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 강화

→

- **생애주기별 교육 복지 인프라 확충**
-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돌봄 강화**

행복의 중요성 증대

-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의 질이 **학생들의 행복과 직결**
- 입시와 지식교육보다 상담·배려 등의 **인성 교육이 행복 증진에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

- **행복한 학교**
- **안전한 학교**

취업 여건 악화

- **일자리와 괴리된 이론중심 교육**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능력을 길러주지 못함
- **지방대학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 졸업자의 소외문제**가 지방 위축으로 이어지는 실정

→

- **현장중심 교육**
- **능력중심 평가**
- **지방대학 육성**

Ⅱ. 국정비전과 교육



Ⅲ. 국정과제 실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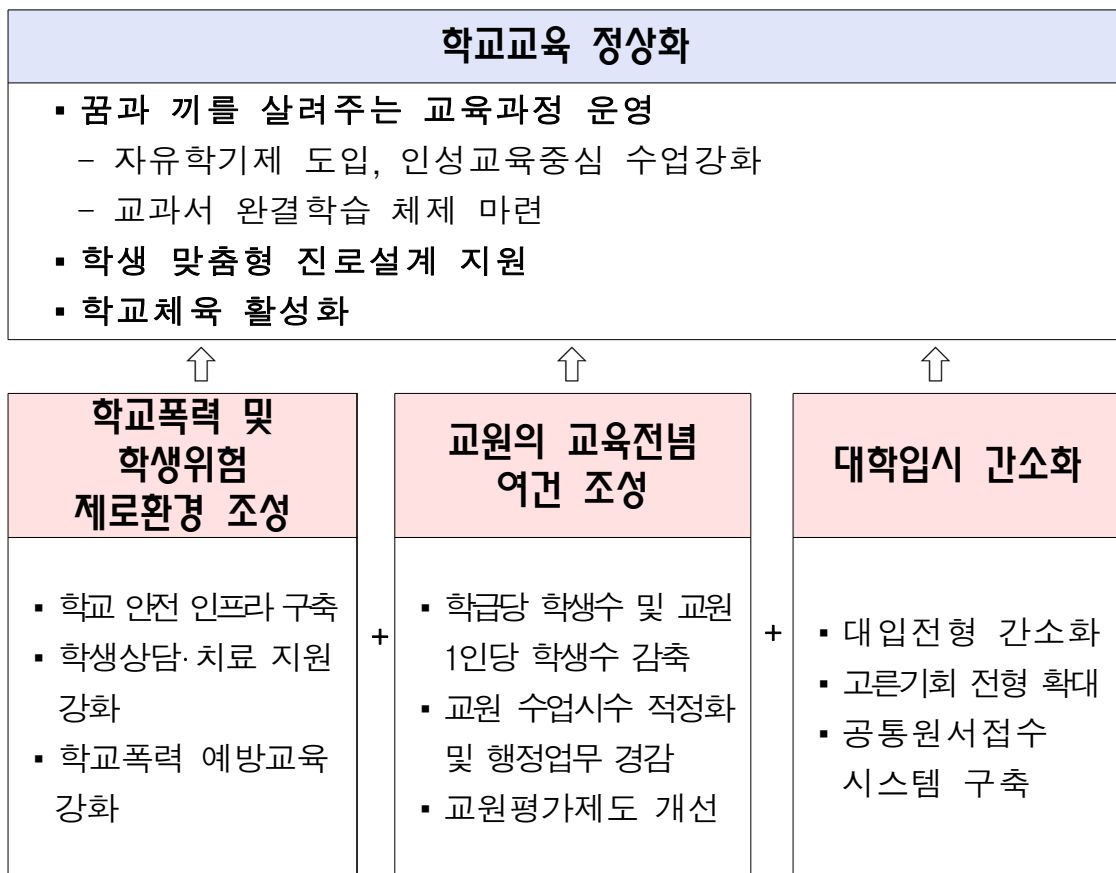
〈 교육 분야 국정과제 체계도 〉



◆ 추진목표

- **(학교교육 정상화)** 입시위주가 아닌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을 실현
-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및 학생을 위협하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교육전념 여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으로 교원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입 간소화)**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부담 완화

◆ 추진과제



① 학교교육 정상화

①-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국정과제 69-1,2,3)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과도한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

- (대상 학기) 학생의 발달단계, 학습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학기 선택 (예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 (교육과정 운영)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확대
- (수업 방식) Block 수업 등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통해 학생 주도의 조사, 발표, 토론, 실습, 프로젝트 수행 활성화
- (평가) 필기시험은 지양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 등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

-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추진체제) 자유학기제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단 및 TF 구성('13.4)
- (지원체제) 중앙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지방의 권역별 주관교육청(3곳)과 연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13.4)
- (학교 현장 지원) 지역별 운영 모형, 운영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학교(37개교) 지정('13.4)·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홍보·연수)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교원·학부모 연수 실시

- 연구학교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14~'15년 희망학교 적용, '16년 전면 도입 추진

-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현행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13.6)

-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학교수업의 내용·방법 및 평가방식 전환 지원
 - 인성덕목을 체계화하여 수업에 반영하고, 지식 전달위주 수업을 협력학습·토론학습 등 학생중심 참여수업으로 전환
 - * 교과별 협력학습 모델과 교수·학습자료 개발('13.4~8)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등에 우선 보급('13.9) → 전체 학교 보급('14)
 - 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 평가방법 개선('14)
-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13.4~)
 -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교사의 수업·평가역량 강화 연수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 * (중앙) 교수학습개선추진단→(시·도) 교수학습 컨설팅 지원단→(학교) 교과동아리 활성화

□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

-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13.4~'14.2)
-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환경 구축
 - 디지털교과서(중학 사회, 과학, 영어) 개발을 추진하고, 시범적용을 위한 연구학교(초·중 144개교) 지정·운영('13.5)
 - 가정 학습과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 조성(교수 학습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등)('13.12)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모델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4월) ▪ 연구학교 37개교 선정(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13년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학교 우선적용('14~'15) ▪ 자유학기제 전면실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교과연구회 지원(4~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학습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등에 보급(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학습 평가방법 개발('14) ▪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발굴·확산('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착수(4월) ▪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지정(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교과서 활용 환경 개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교과서 연차적 개발('15~'17) ▪ 디지털교과서 적용('14~)

1-2.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국정과제 69-5]

□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 '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커리어넷(진로정보포털)을 활용한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 '13년 4,550교에 배치(84%), 진로심리검사 6종 및 스마트상담 앱 운영
- 초등학교의 진로활동과 특성 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심층적 진로가 가능하도록 개선('13.9)
 - ※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13.4)
 - ※ “진로수업-검사·상담-진로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역량 강화

- 일반 교과를 통해서도 진로와 직업 이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간 협력 활성화
 - ※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지원,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확대, 에듀팟을 활용하여 개인별 진로포트폴리오 지원
-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지역 단체·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업체험매칭시스템” 운영
 - ※ 시·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고생 약 132만 명 지원
 -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기관 인증, 자치단체 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진로교육법」을 금년 상반기 제정 추진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넷 온라인 상담위원 선발·연수(3월) ▪ 「진로교육법」 제정 추진 ▪ 학교진로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배치 진로진학상담 교사 추가 선발 (9월) ▪ 초-중등 진로연계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9월) ▪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개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14) ▪ 공공기관 직장체험 확대 ▪ 온라인진로설계 지원 강화

1-3.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국정과제 69-4)

□ 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 내실화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방안 마련*('13.6)

* 체육수업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및 인센티브제 검토

- 중·고교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전담할 스포츠 강사 배치 확대

※ 중학교스포츠강사(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 : ('13) 5,313명 → ('14) 6,153명

※ 고교스포츠강사(“토요 운동의 날” 운영) : ('13) 1,612명 배치 → ('14) 2,303명 배치

□ '1 학생 1 스포츠' 문화 조성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초·중·고 스포츠클럽 3,000팀을 지원('13.4)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우수스포츠클럽지원: ('13) 3,000팀 → ('14) 4,000팀

-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내 및 교육지원청 리그 대회 개최('13.4)

※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 ('13) 1,780리그 → ('14) 2,670리그

- 여학생 스포츠클럽 및 프로그램 확대, 탈의실 설치 등 여학생 체육활성화 기반 마련

※ 탈의실 설치 확대(안) : ('12) 4,229교 → ('13) 4,429교

여학생스포츠리그 운영 : 교육지원청별 3종목 이상

□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다양한 학교 운동장(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등)을 조성

* '14년부터 매년 다목적 체육관을 15교에, 다양한 운동장을 150교에 조성 예정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강사 배치 (3월) ▪ 우수스포츠 클럽 선정 (4월)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 방안 확정(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지속 운영('14~)

②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국정과제 86]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 학교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Green Food Zone'(식약처), 'School Zone'(경찰청) 등 '학생안전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TF운영('13.4~)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13.12)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기적인 학교안전 실태 모니터링 등 운영 내실화

※ 학교안전 실태 현장 모니터링 및 심층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 마련

○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여 패키지형 집중 지원*('13.3~12)

* 학교컨설팅, 학생상담인력 및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우수교원 우선 배치,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어울림프로그램 지원 등

□ 피해·가해학생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강화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전문상담교사 : ('12) 1,422명 → ('13) 1,887명

※ 일정규모 이상(학생수 101명)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13)

○ 학생상담과 치료를 위한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 하고, Wee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13.3~12)

※ Wee 클래스 : ('12) 4,658개 → ('13) 5,158개 / Wee 센터 : ('12) 139개 → ('13) 171개 / Wee 스쿨 : ('12) 4교 → ('13) 7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대상 : 초1·4, 중1, 고1 학생 대상)를 통한 고위험군 학생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운영('13.3~)
 - 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병의원·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별 맞춤형 관리 강화
- ※ 복지부와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전문기관(병·의원) 협력모델을 '15년까지 시·도별 1개 이상 구축

□ 현장·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학교 현장의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 * 콩깍지 가족 프로그램(서울 명신초) : 학생·학부모·교원이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 시범운영 중인 '어울림프로그램*'을 보완, 표준화된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학교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13.9~)
 - * 집단상담, 감성코칭, 대화법 등의 학생·학부모·교원 참여 소통증진 프로그램
-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력하여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및 확산('13.4~)
 - * 또래상담(교육부·여가부): ('12) 4,638교 → ('13) 5,000교 / 또래조정(교육부) : ('12) 79교 → ('13) 90교 / 학생자치법정(법무부) : ('12) 660교 → ('13) 1,000교

□ 현장중심의 근원적 학교폭력예방대책 강화

- 학생·학부모·교원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2.6)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근절방안 마련
 - * 추진절차 : 성과분석(5월, 학생·교원·학부모 의견수렴) → 시안마련(6월) → 공청회 및 최종안 확정(7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안전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T/F운영(3월, 계속) ▪ 학교안전인프라 모니터링 및 심층점검(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안전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12월) ▪ '14년도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 지침 수립·시행(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 지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법개정, 12월) ▪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 운영(3~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 운영 확대('14년 8개→ '15년 시도별 1개 지역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령개정 추진(4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4월~) ▪ 학교폭력대책 성과분석(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근절방안 마련(7월) ▪ 어울림프로그램 표준화 및 적용(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프로그램 확대

③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72]

□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 시·도교육청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학급 신·증설 계획을 수립('13.6)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 추진

* OECD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10) : 초 21.2명, 중 23.4명

* 학급당 학생수 목표 : 초등 ('12) 24.3명 → ('17) 23.0명

중등 ('12) 32.4명 → ('17) 25.0명

- 수업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 중 학급 증설이 용이한 학교는 '14년부터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기존 시설(잉여교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실 확보부담을 적정화
- 이와 함께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시 인근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급 수를 책정하는 등 지역간 균형 도모

□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연차적 추진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13.10)하고, 단계적 증원 추진(~'20)

* OECD국가 평균('1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등 15.9명, 중등 13.7명

*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목표 : 초등 ('13) 20.3명 → ('14) 19.7명 → ('17) 18.1명
중등 ('13) 18.4명 → ('14) 17.4명 → ('17) 14.7명

-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원 외에 정규교원의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13.5)

* 가능한 한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해소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13.4)

※ (주요내용) 교원이 내실있는 수업 준비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이 담당할 수업시간 규정

- 각급학교 교원의 수업시수 현황 분석을 거쳐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학교현장에 적용('14~)

*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정('13.11)

- 교원 증원 규모 등을 반영하여 표준수업시수 단계적 감축 추진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학교별로 기존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활용하여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추진('13, 연중)

- 교원,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교원행정업무 경감 자문단'을 구성('13.3)하여,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담당 업무(안) 마련('13.6)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13.10)하고, '14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 확대 배치('13.12)

- 시·도별 학교교육통계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대폭 경감 추진('13.12)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통계를 학기별로 관리·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13.4)

- 학교회계(에듀파인) 시스템을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개선('13.6)

※ 사용자 의견수렴·분석('13.4~5), 시스템 개선('13.6), 만족도 조사(1차: 7월, 2차: 12월)

□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교원평가제도 개선

- 각종 교원 대상 평가의 시기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

-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하여 각종 교원 평가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 검토('13.4~'14.12)

※ 1단계 시범운영('13): 2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

2단계 시범운영('14): 3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 평가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조정하고, 평가 간 유사한 세부 평가내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14.4~'15.11)

-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령 체제로 통합할지여부 결정 ('14년 말)

※ 단일법령화 추진시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관련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실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시행계획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보충 관련 정규교원 적극 채용 활용방안 검토(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 마련(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증원 연차적 추진 ('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제정(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표준수업시수 현장 적용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통계관리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4월) ▪ 에듀파인시스템 사용자 의견수렴(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 수립(10월) ▪ 에듀파인 시스템 만족도 조사 (7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행정지원인력 단계적 배치(~'17년) ▪ 학교교육통계시스템 가동('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평가 개선 추진계획 수립(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평가 동일시기 실시 시범운영(~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여부 결정('14말)

④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국정과제 70)

□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대입전형 간소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
 - ‘대학입시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확정·발표 예정(‘13.8)
 - * ‘1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13.11)에는 핵심전형요소 중심으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제시
- 전형명칭 단순화는 ‘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 *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주요사항에 적용(수시 ‘13.7 및 정시 ‘13.11)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
- 학생·학부모들이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강화

□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 적극 유도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명시(‘13.8)
- 특히, 거점 국립대가 주도적으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도록 지도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국정과제 58-3)

- 표준화된 원서를 한 번 작성하여 접수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중복합격 검증 등이 가능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추진(‘13~)
 -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13.8, 대교협) 발표 시 구축방안을 예고

<실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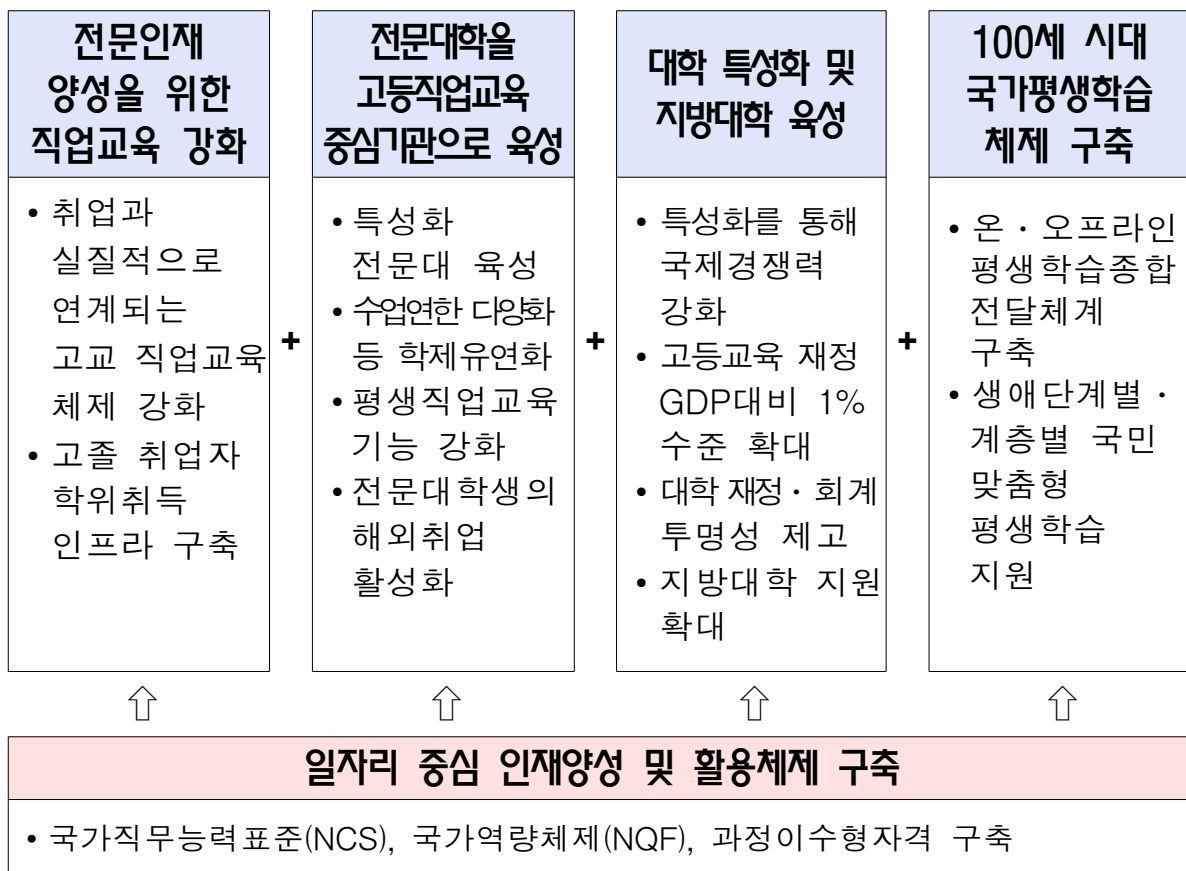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간소화 정책연구 진행(4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8월)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추진(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시행(‘14)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시범 운영(‘14)

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능력중심 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연계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경로 마련
- **(대학경쟁력 강화)**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 역량강화로 산업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양성·배출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인생후반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추진과제



①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정과제111-2)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 교육·훈련과정을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해 '14년까지 모든 직무분야의 표준 개발

* 산업인력관리공단·직업능력개발원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단」을 설치하여 20여개 Working Group(Sector Council·학계 전문가 등 구성) 중심으로 부분별 표준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편 추진

-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설계, 평가, 자격신설 등을 일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매뉴얼” 개발('13.7)
-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체, 산업별 협의체와 협력하여 시범 학교를 지정·운영한 후 확대('13.9)
- (4년제 대학) NCS기반으로 교육(취업)중심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유도

※ 공학기술교육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장교육, 학점인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기본계획 수립('13.9)

- NQF에 기초해서 직장교육, 평생교육 등을 학점으로 전환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13.12)
- NQF에서 제시된 직무역량수준을 토대로 국가 또는 민간자격의 틀을 정비하는 방안 마련('13.12)

※ NQF : 다양한 능력지표(학력, 경력, 자격 등)간에 상호 동등하게 평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직무역량 수준체계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자격정책심의회 내에 「(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3.4)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운영·활용 방안, 국가역량체제(NQF)도입 등 심의

* 교육부 차관 고용부 차관 공동위원장, 관련부처 국장, 민간 전문연구기관, 교육계 및 산업계 참여

□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 제도 도입

-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제대로 평가받아 별도의 검정 없이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13.9)

- 제도 도입을 위해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13.4~9)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한 특성화고, 국립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에 우선 적용(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고용부), 국가공인 민간자격(교육부)

- 과정이수형 자격 관리·운영체계 및 로드맵 수립('13.12)

- 능력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재 채용과 급여, 승진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격-교육훈련의 선순환 체계 마련

□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안착

- 교육부 소관 분야에서 직무능력평가제 시범운영 방안 마련('13.12)

-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 직원 채용 및 승진 시 시범 도입

- 교원 직무능력표준 등 교육분야 국가 직무능력표준 개발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개발된 직무별 요구역량에 기초한 민간분야의 채용 시스템 설계 및 시범운영('13.9)

- 2~3개 직업·직무분야를 선정하여 직무별 요구역량을 도출하고 채용기준을 개발·보급하고 활용을 유도(13.8)

<실천계획>

취업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NCS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개발 및 활용 매뉴얼 개발 (7월) ▪ NCS기반 교육과정 시범학교 지정(9월) ▪ NQF 구축 기본계획 수립(9월) ▪ NQF 기반 국가자격체제 정비 방안 마련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까지 모든 분야 개발 표준개발 완료 ▪ '15년까지 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 완료 ▪ 교육과정-자격-직무의 상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관련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9월) ▪ 과정이수형 자격·운영 체계 및 로드맵 수립(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운영('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능력 중심 평가 시범운영 및 기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 시스템 본격 적용

②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국정과제 73)

□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교육 체제 강화

- 「NCS 개발 및 활용 계획」과 연계하여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14년까지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지역 전략산업 등 기술명장 육성 필요 분야를 발굴하여, 마이스터고 8차 지정 계획 수립 시 반영('13.5~12)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력 필요 분야를 발굴('13.6)하고,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13.5)하고, '14학년도부터 선발 확대

* 자격 소지, 취업의지 등을 반영한 별도 전형으로 일부 시·도와 학교에서 개별 시행

-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위탁과정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13.6)

□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계속교육 시스템 강화

- 선취업 후진학 과정 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13.5)
 - 재직자특별전형 선발을 확대·내실화하고, 전국적으로 산재된 소수의 후진학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대표 대학을 지정*·운영

* '13년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농업, 해양분야 등)

- 고졸 취업자에게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사·학사(국내) → 석·박사(국외)로 연계되는 국비유학생 선발계획 수립('13.6)

* 계획수립(6월) →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7월) → 고시(하반기) → 선발('14년)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 지정 및 특성화고 지원 확대 분야 발굴(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 수립(6월) ▪ NCS 기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개발('13~'14) ▪ 마이스터고 신규 선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각론 고시('14) ▪ 정부부처 특성화고 지원 확대 ▪ NCS 기반 교과과정 적용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개선 권고안 마련(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위탁과정 내실화 방안 수립(6월) ▪ 취업희망자 별도 특별전형 시행(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교육이 가능한 우수 교육훈련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업 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취업자 국비유학생 선발 계획 수립(6월) ▪ 국비유학규정개정(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선발 ▪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③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국정과제 74)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현장 선호도가 높은 산업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전문대학을 산업계 수요중심의 교육기관으로 개편 유도

※ ('14) 50개교 → ('15) 70개교 → ('16) 100개교

□ 수업연한 다양화 등 유연성 확대로 전문대학 기능 다변화

-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 강화
 - 전문대학 학과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연한을 다양화(1~4년제)하고, 비학위 과정부터 학사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학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를 통해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 전문기술·전문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 ('13) 고등교육법 개정 → ('14) 시행령 개정 및 4개 권역별 대학원 설치

□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으로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일부 전문대학을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 직종 및 직무능력 수준에 따라 단기에서 장기과정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수시입학을 허용하여 입학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 창업교육, 자격취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등 성인대상 직무역량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14) 8개교 → ('15) 16개교 (시·도별 1개씩 16개교 시범 운영)

□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학생 대상으로 해외진출 산업체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 * ('13) 5개교 → ('14) 15개교 → ('15~) 20개교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모형 개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14) 50개교 ('15) 70개교 ('16~) 100개교(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학위과정·수업 연한 다양화 제도개선(5월) ▪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개정 ('14) ▪ 4개 권역별 대학원 설치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 육성 모형 개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6월) ▪ ‘세계로 프로젝트’ 기본 계획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 육성 ('14) 8개교 ('15) 16개교(누적)

4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국정과제 113)

□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 지방대학이 우수인재 양성,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가칭)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계획 수립('13.6)
 - * 사업규모, 내용, 모형,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추진방안 확정
- 경쟁력 있는 명품 지방대학, 학부·학과를 발굴·육성하여 세계 수준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가칭)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 마련('13.6)
 - * 대학 강점 분야 등을 특성화하여 중소규모 명품대학·명문학과로 육성
-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금년도 지원계획을 수립('13.4)

□ 지역인재 유치 및 활용 강화

-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특성화·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진학·취업·정주대책을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발표('13.6)
 - * 동 방안을 바탕으로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 마련('13.6) 후 발의('13.9)
-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위해 특성화 분야 진학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마련
-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기존 지역인재의 공직 입직 및 공공기관 채용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역인재들의 균형적 참여 방안 마련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육성방안 정책 연구(4월) ▪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지역거점대학 사업 기본계획 마련(11월) ▪ '14년 특성화 사업 기본 계획 마련(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육성법 마련(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육성법 발의(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

5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국정과제 71)

□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 육성

- 종합적인 대학발전 전략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대학발전기획단*' 구성·운영('13.4~5)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구조개혁 및 지방대학·전문대학 육성 등 주요 대학정책 방안 마련

- 대학의 강점 분야, 산업계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추진

- BK21-WCU 후속사업("가칭)BK21 플러스") 추진을 통해 연구 중심대학 기반 강화 및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 지원

- 우수 학과·학부 중심으로 대학 내의 자원 집중 지원 유도

□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

-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국가장학금 확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육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체계 재구조화

-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성과협약서 제출 및 중간 이행점검 강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

※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GDP 대비 %) : ('13) 0.84→('14) 0.90→('15) 0.94→('16) 0.97→('17) 1.0

□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 사립대학의 재정적 책무성 확보를 위해 재정·회계 투명성 지표를 개발('13.5)하고, 적립금의 사용내역 투명화 추진(사립학교법 개정, '13.12)

- 재정·회계 투명성지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반영('13.12)

* 법정부담금 부담의무 충족,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비율·법정기준 수익률 충족, 적립금 적립한도 준수 등을 지표화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ERP) 구축 추진

* ('13~'15) 대학의 각종 업무(인사, 재정, 학사, 연구 등)와 여러 회계를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구축→('16) 시범운영→('17)전면 시행

□ 대학평가체제 개선 및 상시적 구조개혁으로 대학경쟁력 제고

- 대학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 교육 및 산학협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합동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평가 준비를 지원
- 안정적·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구조개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의 법적 근거 마련
 - * 현재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 기존 구조개혁 틀*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마련('13.5)하고, 관련 위원회 인적 구성(지방대 인사 포함 등) 개선
 - 학사관리 및 경영실태가 취약한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
 - *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 '13년의 경우에는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대학의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을 개선

□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성화 (국정과제 3-1,2)

-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관리,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 마련('13.6)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간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지정 확대 및 학연교수제, 교수의 산업체·연구소 파견 근무 등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13.12)
-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를 통해 창업교육에서 창업기업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청년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 창업교육 로드맵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중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발전기획단 구성·운영(4월)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5월)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발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편(6월) 및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 및 관리 강화 ▪ 대학 정보공시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3월) ▪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지표 마련(5월)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기본계획 수립(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ERP)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학년도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발표(4월) ▪ 향후 구조개혁 추진모델 마련(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상시적인 질 관리 유도

⑥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국정과제 75)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13.3~'14)

*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모형 개발(3월~5월), 전담조직(스마트 평생교육 지원센터) 구성 및 전달체계 완성('14)

*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13.12)

- **광역시자치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13.5, 2개 시·도)

* 시·도 단위에서 만들어진 원스톱 평생교육 정보시스템('12년 현재 7개 시·도 구축 운영 중)

○ 주민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학습지원센터**를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설치**('13.5)

* 연차별 확대: ('13) 16개 → ('14) 60개 → ('15) 152개 → ('16) 227개 지자체

- 일과 학습 병행 등 주민과 산업계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대학중심의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 대학·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추진시 '지역사회 연계성' 평가비중 강화('13.5)

□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청년층)**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성인친화형 대학을 육성하여 계속 교육을 희망하는 재직자 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평생학습중심대학 역량강화사업 확대 : ('12) 25교 → ('13) 35교

- **(중·장년층)** 조기퇴직, 창업·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발적 학습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 방송대의 창업·전직·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 ('12) 32개 → ('13) 62개 과정

- **(노년층)** 취미·여가생활, 건강·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변화 적응 지원 등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기회 제공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지원을 통한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유도('13)

- **(취약계층)** 저학력자(문해교육), 경력단절여성(학습동아리 지원), 군인(군 학습경험 인정) 등의 기초 학습권 보장 및 제2경력 창출 지원

- 지자체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 선정 지원* 추진('13.3)

* 지자체의 우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12) 107개 → ('13) 130개 지자체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모형 개발(5월)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자체 지원(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계획 수립(6월) ▪ 평생교육법 개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평생교육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14) ▪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망 개통('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학습지원센터 시범 설치 지자체 지원(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설치 지자체 컨설팅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센터 설치('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3월) ▪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 확대('14)

3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추진목표

- **(돌봄서비스 강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 **(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고교 교육비 지원,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꿈과 끼 실현의 기반 제공
- **(고른 교육기회 보장)** 경제적·문화적·지역적 차이 등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추진과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돌봄 기능 강화 ▪ 초등 돌봄 기능 확대 ▪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비 경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 ▪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①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국정과제 67-2, 66-5)

□ 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7-2)

-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현행 3~5시간 → 점심시간 포함 5시간 원칙)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침돌봄, 누리과정 방과후돌봄, 저녁 돌봄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유치원의 돌봄기능 강화
-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운영 형태와 방법 등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마련('13.12)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6-5)

- 오후 5시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14년부터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제공하는 방안 마련
-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 무상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
- '14년 이후 학년별로 연차적 지원 확대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으로 확대
 - * 수요조사(3월) → 단위학교 운영방안 마련(8월) → 시범운영(34개교, 2학기) 등을 거쳐 전면 시행

□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운영 (국정과제 66-5)

- 강사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학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기반 마련
 - * ('13) 51개 → ('14) 100개 → ('15) 150개
- 중앙 및 시·군·구 단위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처별 돌봄 사업간 연계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 * 연계 사업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 * 부처통합 돌봄서비스 시범운영(~'13.6, 6개 시군구) → 전국 확대('13.11)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통합 돌봄서비스 시범운영(~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 마련(12월) ▪ 방과후무료돌봄 시범학교 운영(9월~'14.2월) ▪ 시군구 돌봄협의체 구성(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6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대상 확대 ▪ 부처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14)

②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②-1.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국정과제58-1,2)

□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국정과제 67-2)

- 3~5세 누리과정 학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2) 만 5세 전 계층 월 20만원, 만 3~4세 소득하위 70% 각각 월 19.7만원, 월 17.7만원 → ('13) 만 3~5세 전 계층 월 22만원 → ('16) 월 30만원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을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13.5)

-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단계적 처우개선 병행 추진

※ 교원 1인당 처우개선비 지원 : ('12) 35만원 → ('13) 40만원 → ('17) 60만원

-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신·증설되는 유치원에 배치될 교원 대상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문성 확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13.5)

-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 수립('13.9)

- 초·중등교육법 개정('13.4),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검토안 : ('14) 읍면·도서벽지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 ('15~'17) 도시지역 신입생부터 학년별로 순차적 적용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학교 내 평가, 고입·대입 등 각종 입시에서 **시험출제** 등이 교육과정(교과서)의 범위·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 추진('13.4)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13.4~12월)

< 법안 주요 내용 >

- 선행교육(초·중·고 교육계획상 학기를 앞서는 교육) 금지
-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출제 금지
- 고입·대입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 * (고입) 학교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별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 수립 시 반영
- (대입) 대학 자체 선행학습 영향평가 → '중앙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대학별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 수립 시 반영
- 선행교육 관련 심의기구(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 장관·교육감 소속) 설치·운영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시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선행교육 방지 지침,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식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13.12)

-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과목(수능, 영어, 수학) 위주로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 및 서비스 내실화**로 사교육 수요 경감

-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13.3)하고, EBS 교육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13.6)

<실천계획>

취입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비 지원 실태 점검 (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누리과정 학비 단계적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4월) ▪ 고교 학비 지원 사업 통합 방안 마련(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실시계획 확정(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무상교육, '14년부터 시작하여 '17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 (안) 발의(4월) ▪ EBSmath 사이트오픈(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 제정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 ▪ EBS 교육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math 서비스 대상을 초·중·고로 단계적 확대('14~)

②-2.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13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 분위별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

* (기초~소득1분위) 450만원 전액, 소득 2분위 60%, 소득 3분위 40%, 소득 4분위 30%, 소득 5분위 25%, 소득 6분위 20%, 소득 7~8분위 15%

- '14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25% 수준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원(추후 세부확정)

- 생계형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기준(B⁰) 폐지 등을 포함하여 완화 추진
- 다자녀 가구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13.7)하고 셋째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4)

* '12년 국가장학금 다자녀 신청자 고려 약 3,600억원(약108천명) 소요추산

- '14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이행관련 기본계획을 마련('13.12)

□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하여 실질 이자부담을 완화
- '13년 1학기 대출이자를 인하(3.9%→ 2.9%)하여 실질적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지되도록 지속 지원
- 소득 8~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를 지원

- 금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 추진

* 든든학자금(ICL) 대출자는 '12년부터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우선 실시 중

○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9년 2학기까지 시행한 학자금 대출(4조 3,449억원)을 **든든학자금(ICL) 대출로 전환 추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 ('13.4)

□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방식의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 수용률 제고

- '13~'17년 대학생 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13.2 완료/국토부-교육부 합동)

* ('12) 18.4%, 29만명 → ('13) 21%, 33만명 → ('17) 25.0%, 40만명(사업비 기준)

- 소요 재원의 분담*을 통해 대학 캠퍼스 내 국립대 **BTL** 기숙사, 사립대 재정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유형	대상대학 수	수용인원	소요재원
국립대 BTL 기숙사	4개 대학	2,050명	613억원
사립대 재정 기숙사	12개 대학	1,800명	489억원
사립대 공공 기숙사*	8개 대학	4,546명	1,122억원

* (재원분담)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자체 10% 부담

- 대학 캠퍼스 외 기숙사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부지선정 협의 (~'13.5) 및 설계·공사 착공('13.6)

* 대학생 행복(연합) 기숙사(2,000명, 510억원), 학생종합복지센터(1,000명, 258억원)

○ 사립대 기숙사 건축비 저리용자 확대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숙사비 인하 추진 (월 28~40만원 → 월 17~24만원)

□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 취업 촉진,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 현장실습 ~ 취업” 연계형 장학금 지원, 1인당 평균 연 11백만원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13.5/'13.9)

* 봄/가을 학기 각 573명 선발, 총 9,450백만원 지원 (사업관리비 550백만원)

* '12년 81개 LINC 대학 총 4.4만명 현장 실습 실시, 이중 1.3만여명 중소기업 취업의사 확인

<실천계획>

취 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수혜자 분석(4월) ▪ 국가장학금과 셋째아이 이상 지원 대상 인원 추산 및 소요재원 파악(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아이 등록금지원 기준 마련(7월) ▪ '14년도 기본계획 마련 (1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완성 ▪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4월) ▪ 학자금대출과 채무부담 경감 대상 인원 파악 및 관계부처 협의(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가용재원 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확정(6월) ▪ '14년 시행계획마련(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채무부담 경감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내 기숙사 설계 (5월) ▪ 행복(행복)기숙사 등 부지 선정 협의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내 기숙사 착공 (6월~) ▪ 설계 · 공사 착공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선정 · 설계 · 공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봄학기 대상자 선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학기 장학생 선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까지 80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

③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국정과제 49-11)

-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95%이상 확보
 - * 증원규모 : ('12) 135명 → ('13) 662명 → ('14~17) 매년 1,500명
-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 특수학급 신·증설(누계) : ('12) 500개 → ('13) 1,000개 → ('17) 3,000개
- 대학의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습편의 도모
 -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 ('12) 2,494명 → ('13) 2,500명 → ('17) 3,000명

□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국정과제 50-2, 126-1)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강화 등 한국사회 정착 지원
 - 한국어·문화에 대한 적응교육을 위해 예비학교('12년 25교 → '13년 50교) 및 특별학급('12년 초 13교 → '17년 초·중 120교) 확대
 - * 다문화 특별학급 확대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3.5월 중)
 -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12년 18,000명 → '13년 40,000명)
- 탈북학생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탈북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 예·체능,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역량 개발 지원
 - 탈북학생들에게 적합한 표준교재 개발·보급('13년 초1~2, 중1 교재 개발)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특수교사 소요 정원 요구(4월) ▪ 장애대학생 도우미 선정(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급) 신·증설지침 마련(11월) ▪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평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예비학교 설치(3월) ▪ 다문화 특별학급 등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전담교원 연수(8월) ▪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별 맞춤형교육 지원(3월) ▪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학교 /수업연구회 성과보고회(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추진

IV. 부처 협업과제 및 현안사항

◆ 그간의 노력

- 교육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청년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 3~5세 누리과정 도입, 학교폭력 대책, 고졸 취업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산학협력 및 대학생 기숙사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 향후 중점과제

-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문화융성, 경제 부흥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구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등

칸막이 제거를 통한 부처간 협력 분야

- 
-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해수부, 중기청 등)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고용부)
 -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고용부)
 - 사내대학 운영 지원(고용부)
 - 문화예술교육·체육교육 활성화(문체부)
 - 스포츠강사 배치, 운동장 건립 등
 - 3~5세 누리과정 도입(복지부)
 - 학교폭력대책(국조실,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 교통안전(국토부, 경찰청 등)
 - 학교급식 및 전염병(복지부, 식약처 등)
 - 창의·융합형 수학·과학교육(미래부 등)
 - 산학협력 및 창업 지원(미래부 등)
 - 지역산업·지방대학 연계 지원(미래부, 안행부, 산업부 등)
 -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산업부, 고용부, 등)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국토부 등)
 - 의과대학 정원 협의(복지부)

1 협업 과제

1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꿈과 끼 발산 (문체부)

□ 중요성

- 학교체육·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 교육부는 주로 학교 내 학생 수요를, 문체부는 학교 밖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양 부처 협력을 강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문체부 소관) 제정, '12년 학교체육진흥법(교육부·문체부 소관) 제정

□ 협력 계획

- (추진 분야) 체육·문화예술교육 및 자유학기제 운영 등과 관련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업 추진
 - 체육교육분야에서는 스포츠 강사 역량 제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 시설 확충 추진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예술강사를 활용한 통합교육, 예술 동아리 활성화, 교과융합 프로그램 등을 확대
 -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의 학교도서관 보급 확대, 미디어 교육 지원, 학교 공간의 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등
- (정보 활용) 학생 수요와 전문인력풀, 체육·문화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강화

□ 추진 일정

- 양 부처 협업 TF 구성, 기존 협업과제 강화 및 추가 발굴('13.4)
- 양 부처 공동 추진계획 발표('13.6)

②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복지부, 재정부, 인행부)

□ 현황 및 필요성

- '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시작으로 부처간 협업이 진행되었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유치원은 유아교육에 강점이 있는 반면 보육·돌봄 기능이 취약하고, 어린이집은 보육·돌봄 기능이 강점인 반면 교육 프로그램이 취약
- * 누리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12년 만 5세, '13년 만 3~4세)

□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구성)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성하여 유·보 통합 준비 추진('13.상)
- * 민관합동 (가칭)'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운영('13.4~)
: 유아교육·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방향 제시,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수립·추진 등 담당
- (누리과정 평가) 금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지역 시범 운영) 유보통합 모델을 지자체 시범지역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모델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법령 개선 등 제도 보완
- 복지부와 시범지역 선정·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법령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
- * 유치원에 돌봄기능 강화, 어린이집에 교육기능이 강화된 新 모델 적용
- (관리체제 통합)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통합시기를 결정
-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정비 및 중앙·지방의 조직·인력·예산 등 조정 협의

□ 향후 일정

- '민관합동 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계획 확정('13.4~5)
- 지역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13.5~'14.12)

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특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그간 대학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유형별·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 정도 미흡
- 국가 성장동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 특성화된 대학의 육성과 지방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기반 역할

□ 추진 계획

- **(대학 특성화)** 각 정부부처의 대학에 대한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사업 간에 유기적 연계 도모
 - 지역 산업 및 특성, 대학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
 - 부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특성화 우수 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등 효과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 **(산학협력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운영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며, 대학보유 지식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등 '범부처적인 창업 지원 체제' 구축
- **(지역인재 활용 강화)** 지역인재 채용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확대, 지역인재 채용 장려금 등 우대 조치 마련
 -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30%), 공무원 채용목표제·추천채용제 지속 추진
 -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 향후 일정

- 민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학발전기획단과 협의체 구성('13.4)

④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

(고용부, 국토부, 미래부, 문체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안행부, 중기청)

□ 현황 및 필요성

-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조기개발하고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 구축이 필요

□ 추진 계획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자격정책심의회 내에 「(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3.4)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운영·활용 방안, 국가역량체계(NQF)도입 등 심의
- * 교육부 차관 고용부 차관 공동위원장, 관련부처 국장, 민간 전문연구기관, 교육계 및 산업계 참여
- 직무능력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추진할 **Working Group**을 교육부, 고용부가 공동 구성·운영('13.4)
 - 산업현장 전문가, 학계·교육계 인사, 업종 대표 등이 직무능력 표준 개발에서부터 교육 및 활용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직무능력 개발·운영 협업 체계 구축
- 개발된 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즉시 학교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용* 계획을 수립·추진('13.5)
 - * 고용부와 공동으로 시범 대상 직무표준, 학교(특성화고, 전문대학) 선정
- 학력과 학위, 교육 및 훈련, 자격, 직무경력 등을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수준체계(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기본계획 수립('13.9)

□ 향후 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 및 「직무능력표준 개발 작업반」 구성 ('13.4)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 수립 ('13.9)

5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재정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 현황 및 필요성

-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하여 대학생들이 높은 주거임차비, 하숙비 등으로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그동안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행복(연합)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학생 주거부담 해소를 위하여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

□ 추진계획

- 기숙사 수용률을 '12년 18.4%에서 '17년 25%까지 확대(사업비 기준)
-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에 따라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건립 재원* 확보 지원

* 소요재원 : 국민주택기금(국토부), 사학진흥기금(교육부)

< 대학생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국토부-교육부) >

(억원)

'13	'14	'15	'16	'17	계
4,581	4,830	4,805	4,753	4,444	23,413

- 캠퍼스 밖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등 건립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중심의 협력관계를 지자체까지 확대·강화

*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 (추가 확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서울)

-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체제 구축

* (교육부) 투자계획수립, 재원 확보, 설계·공사 등 총괄

* (국토부) 행복(연합)기숙사, 공공기숙사 재원 확보 및 지원

* (기획재정부, 지자체) 캠퍼스 밖 기숙사 건립 부지 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설계·공사 및 운영

□ 향후일정

- 대학생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에 따라 부지확보, 재정지원, 설계 및 공사 등 추진('13.3~)

2 현안 사항

1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인력관리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기능이 다변화됨에 따라 조리사·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인력이 대규모로 학교에 근무
 - * 학교회계직원 수 : ('08) 88,689명 → ('12) 152,609명
-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고용불안 및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학교장인지 교육감인지에 대한 소송 진행 중

□ 추진 계획

- (고용안정·처우개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
 - * 전환계획 : ('12) 71,953명 → ('13) 88,654명 → ('14) 112,903명
 -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 등 단계적 처우개선 로드맵 제시
- (효율적인 학교운영 지원) 학교회계직 인력이 학생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시스템 개편
 - 학교회계직원을 활용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 (단위학교 중심의 관리체제 구축) 학교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한 직종별 인력 배치기준 마련
 -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필요인력을 적기 지원

□ 향후 일정

- 학교회계직원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13.5)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속 추진('13.12)

② 학생 안전관리 강화(경찰청, 국토교통부, 문체부)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문체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 통학,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급식 등의 분야에서 안전관리에 연중 노력
-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과 부주의 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10년에 비해 증가
 -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초·특수·학원·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부적격 운전자 및 보험 미가입 차량*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수학여행 성수기(봄, 가을)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비
 - * 부적격 운전자(2.0%) 및 보험 미가입 차량(1.2%) ('12.5월, 교통안전공단)
-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 중이고, 일부 노후된 학교 건물**이 상존하여 급식 사고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 필요
 - * 전체학교의 99.9%인 11,476개교에서 학생 697만명 대상으로 급식 실시 중
 - 식중독 발생건 : ('10) 38건 3,436명 → ('11) 30건 2,061명 → ('12) 41건 2,114명
 - ** 재난위험 교육시설물 134개 건물 보유('12.11월 기준, 68,695개 건물 중 0.2%)

□ 추진 계획

【 통학버스 】

- (법규 준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시 확인의무 준수 등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리 철저 지도*('13.3~)
 -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 실시 및 교통사고 예방 지도 강화(문체부)
- (안전교육 실시) 학교장은 어린이와 교직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에게 결과 보고('13.3)
 - *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거 유·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교(원)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령 개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시 벌칙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마련('13.하)
 - * 도로교통법 소관부처 : 안행부(경찰청)

【 현장체험학습 】

- **(사전 예방)** 학생·지도교사에게 사전 안전교육 내용 등을 수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보급('13.4)
 - * 차량·운전자 적격여부 등 안전 지도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포함
- **(부처 협력)**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 지원 강화('13.4~)
 - 학생 단체수송 차량 안전점검 강화, 운전자·차량 적격 여부 등 교통안전정보 서비스 제공(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수학여행 성수기 집중 지역에 대해 과속·음주·끼어들기 운행 등 집중 단속(경찰청)

【 학교급식 】

- **(점검 강화)** 식중독 사고 경각심 제고 및 상시적 위생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특별점검(수시)과 정기점검(연 2회) 실시
 - *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대해 연간 최소 4회정도 급식위생 점검 실시
- **(시설 개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 시설을 '15년까지 100% 현대화
 - * 정책목표 : ('12) 61.5% (6,144개교) → ('15) 100% (9,994개교)

【 학교시설 】

- **(안전점검)** 교육시설물에 대한 해빙기(2~3월), 하절기(6~7월), 동절기(11~12월)별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매뉴얼 개선)** 자연재난(풍·수해, 설해, 지진 등) 대처 매뉴얼을 개선·보급하고, 재난위험시설(D급, E급) 조치계획 마련('13.4~5)
- **(재난대응)** 재난발생 예상 시, 기상상황을 파악·전파·보고하고, 학생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발생 시 복구비 지원
 - * 시·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등교 시간조정, 임시휴업 등 조치, 다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시 교육부장관이 직접 등교시간 조정 등 가능

V. 달라지는 교육의 모습

1 100일 후 달라지는 모습

◇ “우리 교육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하고, 교육 현장에는 참여의지와 공감의 확산

이를 위해 교육부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 ☐ 국민 각자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장·차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내에서도 부서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를 정책 홍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 1년/5년 후 달라지는 모습

- ◇ 1년 후에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산됨
- ◇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중심 사회가 구축되는 등 크게 발전했다고 국민들이 평가

- **(학생)**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더불어 배우는 것이 즐겁고, 소질과 적성을 찾아 미래의 꿈을 키워갑니다.

*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 수 : (현재) 0개 교 → ('14) 37개 교 → ('17) 모든 중학교

* 초·중·고 스포츠클럽 수 : (현재) 17만 개 → ('14) 20만 개 → ('17) 30만 개

- **(학부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교육비 걱정 없이 폭력과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 안심하고 보내게 됩니다.

* 학비 지원 고교생 비율 : (현재) 35.4% → ('14) 49.4% → ('17) 100%

- **(교원)** 근무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져서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원 1인당 학생 수 : ('13) 초등 20.3명, 중등 18.4명 → ('17) 초등 18.1명, 중등 14.7명

* 학급당 학생 수 : ('12) 초등 24.3명, 중등 32.4명 → ('17) 초등 23명, 중등 25명

- **(청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열정과 능력만 있으면 학비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 (현재) 44% 수준 → ('14) 절반수준 → ('17) 절반수준 지속

- **(사회)** 일 중심의 교육,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져, 학생은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기업체는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대졸취업률 : (현재) 59.5% → ('14) 62% → ('17) 70% 이상

- **(대학)**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지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끌며,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 고등교육재정 규모 GDP대비 비율 : ('13) 0.84% → ('14) 0.90% → ('17) 1.0%

- **(성인)** 누구나 전직·퇴직에 따른 지식·기술의 습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현재) 35.4% → ('14) 37% → ('17) 45% 이상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1.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① 학교교육 정상화			
①-1.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자유학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 T/F 구성·운영 자유학기제 지원 센터 구축·운영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선정(중학교 37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6월)
<input type="checkbox"/>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 중심 수업 관련 교과연구회 지원 협력학습 모델과 교수·학습자료 개발(~8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input type="checkbox"/>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모형 개발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지정 (초·중144교)
①-2.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input type="checkbox"/> 진로상담 및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리어넷 온라인 상담위원 연수·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연계형 개인 진로포트폴리오 기록·관리 방안 정책연구(~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선발(~9월)
<input type="checkbox"/> 진로선택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학교 및 기업체 매칭 시스템 운영(~9월)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①-3.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체육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한 스포츠 강사 배치 ▪ (고)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리그 대회 개최 ▪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정책연구(~6월) 	
<input type="checkbox"/> 1학생 1스포츠 문화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스포츠클럽 3,000팀 선정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 	
<input type="checkbox"/>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 설치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체육관 · 다양한 운동장 조성 계획 수립
②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input type="checkbox"/> 학급당 학생수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input type="checkbox"/>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연차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수업시수 현황 조사·분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정규 교원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행정업무 경감 자문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에듀파인 사용자 의견수렴 및 분석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행정지원인력(팀)이 담당할 교원 행정업무(안) 마련 (~6월)
<input type="checkbox"/> 교원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평가개선 추진 계획 수립 ▪ 교원평가 개선 자문단 구성·운영 (4월~)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③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input type="checkbox"/> 학교반경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 지정 등 안전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안전지역' 통합 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T/F 구성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학교안전 실태 심층점검 실시
<input type="checkbox"/> 학생 상담 · 치료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확대 ▪ 전문상담교사 추가 배치 ▪ 학생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 · 지원 사업 추진(~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관련 초 · 중등교육법 개정 추진(~12월) ▪ '13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9월) ▪ 생활지도특별지원 학교에 대한 컨설팅 및 집중지원 실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령개정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교사 · 학생 연수 ▪ 예방 프로그램 표준 모델 개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활동 운영 학교 컨설팅 및 자문(~11월)
④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 간소화			
<input type="checkbox"/> 대입전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input type="checkbox"/>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input type="checkbox"/> 한국형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①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input type="checkbox"/>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정책심의회 내 '(가칭) NCS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을 위한 자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②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교육 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 지정 및 특성화고 지원 확대 분야 발굴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input type="checkbox"/> 취업희망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희망자 특성화고 특별전형 개선 권고안 마련 ▪ 시·도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현황 점검·분석
<input type="checkbox"/>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지원 ▪ 고졸 취업자 국비 유학 지원 방안 수립 (~6월)
③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input type="checkbox"/>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모형개발
<input type="checkbox"/> 수업연한 다양화 등 유연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제도 마련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 육성 모형개발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산업체 연계 전문대학 육성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④ 지방대학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지방대학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발전기획단 구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육성 방안 수립(~6월)
⑤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대학 특성화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발전기획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발표
<input type="checkbox"/> 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 점검 기본계획수립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지표(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대학평가체제 개선 및 상시적 구조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학년도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확정·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구조개혁 추진 모델 마련
⑥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input type="checkbox"/>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대의 창업·전직·자기개발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원 대학 선정·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역대학-산업계-지자체 간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 지자체 선정·지원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국가평생 학습 지원체제 구축 모형 개발(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국가평생 학습 지원체제 구축계획 수립(~6월)
<input type="checkbox"/>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학습지원 센터 시범운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지원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3.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①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 돌봄 수요조사	▪ 방과후 돌봄확대 방안 연구(~8월)	
<input type="checkbox"/>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 부처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6월)		
② 교육비 부담 경감			
②-1.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상황 점검(~4월)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유아학비 및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 실태 파악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 초·중등교육법 개정	▪ 고교 학비 지원 사업 통합 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사교육비 부담 완화	▪ EBS수학 사이트 오픈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	
②-2.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input type="checkbox"/>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13년 국가장학금 신청	▪ '13년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수혜자 분석	▪ 국가장학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지원 대상 인원 추산 및 소요재원 파악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	▪ '13년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관계 법령 국회 상정	▪ 학자금대출 및 채무부담 경감 대상 인원 파악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캠퍼스 내 기숙사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 대학 캠퍼스 외 기숙사에 대한 관계기관과 부지 선정 협의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사다리 장학금 봄학기 장학생 선발
③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장애학생 변화추이 조사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 특수교사 소요정원 요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수립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학생 담당교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특별학급, 이중 언어강사 도입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붙임 2

입법 추진 계획

반기별	법령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상 반 기	공교육정상화추진특별법 제정	유·초·중·고교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 유발 시험 출제 금지	'13. 4
	초·중등교육법 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13. 4
	초·중등교육법 개정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13. 4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교육통계 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마련	'13. 4
	학교보건법 개정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시 치 료기관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	'13.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폭력예방교육(수업시간, 방법 등) 구체화	'13.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 대출('09년 2학기까지)을 든든 학자금(ICL) 대출로 전환	'13. 4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13. 5
	고등교육법 개정	입학전형료 전액 환불제도 도입	'13. 6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	고졸 재직자 국비 유학 특별전형 근거 마련	'13. 6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일반고 졸업자도 재직자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한 근거마련	'13. 6
하 반 기	고등교육법 개정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13. 8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등학교의 진로 활동 및 특성 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	'13. 9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지역대학지원, 지역대학진학·장학 정주여건 지원, 지역인재채용목표제	'13. 9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13. 9
	평생교육법 개정	온라인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근거 마련/평생교육시설 유형 재정리	'13. 9
	학교보건법 개정	학교반경 200M이내를 학생안전 지역 지정	'13.10
	교원의 표준수업시수에 관한 규정 제정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운영 구체화	'13.11
	사립학교법 개정	적립금 사용내역 명확화	'13.12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특례법 개정	대학생 진로관련 정보공시 추가	'13.12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공시내용 개선	'13.12

* 법률안 국회 제출 시점임

붙임 3
교육분야 국정과제 현황

구 분		국정과제명	관리 번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69-1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69-2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69-3
	학교체육 활성화		69-4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69-5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86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70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111-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4
	지방대학 지원 확대		113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1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75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67-2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66-5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67-2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58
		사교육비 부담 완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49-11 50-2 126-1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